

2025.11.10.(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3631 / Fax 02-6788-3635

차도순 국장 / 김대경 보좌관(민병덕 의원실) 02-784-9540

을(乙)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생존 위기의 乙, 정부가 나서야 살릴 수 있습니다.”
- 민생예산 4대 분야(소상공인, 취약계층, 노동, 기술탈취) 중액 촉구

2025년 11월 10일 (월) 0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728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乙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900조원을 넘어섰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대출 이자 부담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청년들은 빚으로 미래를 담보 잡히고, 노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을 삭감하며 철저히 乙을 외면했고, R&D예산 삭감으로 성장의 불씨마저 꺼트리려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예산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정부의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곳에서 국민들은 외면당했습니다.

728조원이라는 예산 규모도 지난 3년간 망가진 가계,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삶을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을지로위원회는 더욱 꼼꼼하게, 더욱 전략적으로 예산을 점검하고 보강하겠습니다.

고장 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고쳐가는 자세로, 을지로위원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기치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냈습니다.

이제 성장과 분배의 두 바퀴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성장만으로는 乙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분배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에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예산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해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8조5천억원에서 9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에게 생명줄과 같은 지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에 1조1천5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을 회복시키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위한 정부 신규 예산 6천억원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버티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예산 7천억원도 청년들이 빚이 아닌 저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빚으로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벌써부터 이러한 민생 회복 예산을 '현금성 지원'이라며 삭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생예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생존 위기에 몰린 乙에게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가혹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정부 3년간 망가진 을의 삶을 복원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을 국민의 편에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첫째, 버티고 버티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더 늘려야 합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확대(9,854억원 증액) ▲ 공공배달앱 활성화(870억 원 증액)

▲ 전통시장 시설·안전관리 강화(71억 원 증액) ▲ 청년몰 활성화(45억 원 증액)
 ▲ 전국상인연합회 활동지원 및 전통시장 홍보(각 7억 원, 9억 원 증액)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46억 원 증액)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34억원 증액) ▲지역
 소공인 육성(10억원 증액) 등은 경기 침체 속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견인할 핵심
 예산입니다.

코로나 채무 상환 부담과 경기 둔화로 폐업 위기가 확산된 지금, 소상공인이 장사를 통해 빚을
 갚고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실상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종속돼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98%가 플랫폼을
 이용하고, 절반 가까운 업주가 매출의 75% 이상을 플랫폼에서 발생시키지만 20% 이상이
 수수료·광고비로 빠져나갑니다. 이른바 ‘무료배달’ 뒤에 점주 비용 전가가 존재해
 “생색은 플랫폼이, 부담은 점주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에서 공공배달앱 예산
 870억원 증액은 단순한 앱 지원이 아니라 독과점 완화와 유통 질서 정상화를 위한 공공정책
 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예산(71억 원) 은 화재·재난으로부터 상인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청년몰 활성화 예산(45억 원) 은 청년 창업을 통한 상권 세대교체의
 발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2,560억 원) 은 실제 자금 수요를 반영한 소상공인
 금융안정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합니다.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등 서민·청년금융 지원(1,067억원 증액)
 ▲돌봄통합지원(지역사회통합돌봄) 재정부담 확대(737억 원 증액)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53억원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지원(1,704억 원 증액)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6개 도시철도, 5,768억원 증액) ▲도시철도 노후 시설·차량 개선 지원(1,615억원 증액)은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청년·저신용자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필수 민생예산입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저신용 서민과 청년을 지키는 것은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햇살론특례와 햇살론유스 예산을 1,067억 원 증액하여 고물가·경기 둔화로 커진 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돌봄통합지원 예산은 돌봄 노동자가 제값 받는 사회, 돌봄이 끊기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인력 확충과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동네에서 존엄하게 돌봄
 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끊길까 두려워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제때 치료받기 어렵고, 회복의
 기회조차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상병수당 예산을 늘려 더 많은 취약 노동자가 치료와 생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복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조는 청년·노인·저소득층의 이동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하철·도시철도는 취약계층의 가장 현실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국가는 노후 시설과 차량을 제때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해 안전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체불임금과 산재, 학교급식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넘었고 피해자도 28만명에 달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절도와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 관련 예산을 2천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행 3개월의 보상 범위를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 예산으로,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예산 국회에서 보상 범위 추가 확대 및 지급한도 상향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산재 예방 관련 1조5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산업안전,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이 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방학 중 비근무자 등 교육공무직에 대한 생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교육공무직은 총 15만 7천여명, 이 중 절반이 넘는 7만 9천여 명이 ‘방학 중 비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교급식, 통학차량 지원, 특수교육 실무 등 학교의 일상 운영과 아이들의 생활 복지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되면 임금이 최대 77%까지 감소해 소득이 급감하고, 생계는 불안정해집니다. 이들에게 ‘방학’은 휴식이 아니라 소득이 끊기는 절벽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들의 보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금 격차와 생계 불안을 해소할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예산 국회에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상시근로 전환 전까지 한시적 생계보전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도입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평균 72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방학 중 보수를 13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할 수 있도록 국고 474.6억 원 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먹고, 쉬고, 놀며, 함

께 자라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민생예산입니다.

넷째, 기술 탈취, 사회적 경제 위협 등 을(乙)의 손실 방지 대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27.6억 원 증액), ▲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 및 피해회복지원 (6.8억 원 증액)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막고,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해액 산정과 회복 지원을 통해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 및 피해회복지원 예산으로 ‘기술보호 바우처와 손해액 산정 지원’을 확대해 피해 기업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빼앗겼다고 해서 회사를 포기해야 하는 일, 소송을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속으로만 끓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혁신 중소기업을 끝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乙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절박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10.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참고자료] 2026년 민생예산 증액요청 세부내용

1.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 구역 설계·운영, 상권 브랜딩 및 특화상품 개발, 상권 조성 등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759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자원·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 상권을 집중지원 및 지역별 대표상권으로 육성 등 골목상권의 역량 강화 종합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622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등 소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확대 (정부예산안 대비 1,200억 신규 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서비스 선진화(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공공배달앱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986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R&D 예산 (정부예산안 대비 2,000억 신규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945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가단위 할인축제(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업예산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23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정부예산안 대비 9854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6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공공배달앱 활성화 (정부예산안 대비 870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 경영 혁신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7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인프라조성-시장상권 홍보 및 조사평가 (정부예산안 대비 9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인프라조성-청년몰 활성화 (정부예산안 대비 45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인프라조성-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정부예산안 대비 71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사업(소상공인 실제 자금수요를 반영한 보증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재보증을 위한 필수재원 확보) (정부예산안 대비 2,560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정부예산안 대비 1,200억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34억원 증액)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소공인 육성(10억원 증액)

2.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지역사회통합돌봄) 재정부담 확대 (정부예산안 대비 737억 증액)
- [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153억 증액)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704억 증액)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보조(전국 6개 도시철도) (정부예산안 대비 5,768억 증액)
-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노후 시설, 차량 개선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615억 증액)
-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1조 1,500억 증액)
- [금융위원회] 햇살론특례 및 햇사론유스(햇살론특례 상품 금리 인하) (정부예산안 대비 1,067억 신규 증액)

3. 노동자 보호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3조 신규 증액)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지원(보험료 수입의 20% 국고 지원을 위해 5.8% 일반회계 추가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5조 787억 증액)
- [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4,879억 증액)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전출(출산크레딧 급여) 신설 (정부예산안 대비 7,697억 증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전출(군복무크레딧 급여) 신설 (정부예산안 대비 1,847억 증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확대 및 국고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2,311억 증액)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전출(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정부예산안 대비 450억 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정부예산안 대비 24.99억 신규 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고용조정지원금 설치 (정부예산안 대비 2조 1,250억 증액)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464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 공공성 확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정부예산안 대비 8.3억 신규 증액)
 [국토교통부] 건설기능인등급제 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10.57억 증액)
 [국토교통부] 건설기능인력집중육성사업 (정부예산안 대비 14.8억 신규 증액)
 [교육부] 교육공무직 방학 중 비근무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정부예산안 대비 1.5억 신규 증액)
 [교육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활안정) (정부예산안 대비 474.6억 신규 증액)

4. 기술 탈취 등 을(乙)의 손실 방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기반조성-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정부예산안 대비 27.6억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기반조성-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 및 피해회복지원 (정부예산안 대비 6.8억 증액)